

“새만금 예산 복원, 예산협의 첫 관문”

민주 김성주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尹정부 예산 독재·폭정”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6일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운석열 정부의 예산 독재로 규정,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이 국정감사 이후 여·야 예산협의 첫 관문임을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그동안 대통

령과 총리가 새만금개발과 관련해 강조한 바 없는 지원, 주요한 것은 개발 속도 등의 빌언을 제시하며, 앞에서는 신속한 개발을 이야기하

고 뒤에서는 새만금 사업 무력화를 시도한 대통령과 총리의 기단적 언행을 비판했다.

운석열 정부는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의 부처별예액 6,626억 가운데 78%에 달하는 5,147억을 삭감했는데,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삭감 규모로는 이례적일 뿐 아니라 삭감의 근거 역시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총리의 적절

성 재검토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지역의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국책사업임을 휙휙했다.

또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에 들어간다면 2025년 말 종료가 예상되는데, 2025년 이후에 새로운 ‘비파저’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임기 내에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도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 철도를 예로 들며 ‘공정한과 형평성’이라는 국가 예산의 대원칙을 위반한 운석열 정부 폭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예산 복원을 거듭 확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790억에서 66억

으로 대폭 줄어든 새만금공항과 달리 가덕도신공항은 부처가 요구한 1,647억의 세 배가 넘는 5,363억이 배정됐다.

새만금과 동일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추진 시기조차 상대적으로 늦었던 가덕도신공항에 부처가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예산을 물어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행정은 철도사업에서도 드러났다. 내년도 국철도 건설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정부 예산을 투입한 총 42건의 철도 예산 중 부처 요구 대비 예산이 삭감된 곳은 월곶~판교 복선전철과 새만금 인입 철도 두 곳인데, 그마저도 새만금 철도는 전액 삭감돼 0원을 기록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새만금 예산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전북을 버리고 전북을 희생해 다른 지역과 사업 살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리고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국책사업을 포기하고 균형발전과 국가 예산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대통령의 폭정으로 문제 제기 없이 재검토 시기에 나선 국무총리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기록될 새만금 예산 삭감 폭거와 사례 수습을 위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대통령 사과와 국무총리 사퇴’라는 문구에 담았다”며,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시작될 예산 정부에서는 새만금 예산 복원이 여·야 예산협의 첫 관문이다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박정규 전북도의회 의원은 26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 도민들의 민심을 알리기 위한 마라톤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 위해 직접 국회로 뛰고 걸을 것”

박정규 도의원, 마라톤 투쟁 대장정

내달 7일 범도민 총궐기대회에 맞춰

“정부 불통·무능·무책임함 알리겠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도의원(임실)이 새만금 쟁취리 피행에 따른 책 임전기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전북도민들의 민심을 알리기 위한 마라톤 투쟁에 나섰다.

박정규 도의원은 26일 마라톤 시작에 앞서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주요 SOC 예산삭감에 대해 항의하며, 지난 9월 5일 이후 의원 23명이 사발을 했고 오늘까지 33명의 의원이 참여해 52일째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대통령 본인이 한 공약도 헌신하지처럼 자비리는 이 정부에 과연 새만금과 전북의 운명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박정규 도의원의 이번 마라톤 투쟁은 26일 전북도의회를 출발해 다음달 7일까지 총 13일간 논산·공주·세종·천안·광명·수원 등을 거쳐 서울 국회에 도착하기 전까지 총 280km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일부 구간에서는 전북도의회 동료 의원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 전망대 건립을”

권요안 도의원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원주2·더불어민주당)은 25일 원주군의회 서남용 의장과 김규성 의원, 전북도 원주군 등 관계 공무원과 대둔산도립공원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 주위를 답사하며 전망대 건립 방안을 모색했다. 권요안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는 농민군이 우금치 전투 패배 이후 대둔산의 힘한 산세를 이용하여 일본군에 끝까지 항전했던 곳이었던 민족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깃든 대둔산 미천대 부근 바위 위에서 근거지를 마련하고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에 맞서 끝까지 저항했던 곳이며, 2015년 12월 전라북도 기념물 제131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원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는 대둔산 미천대 부근 바위 위에서 근거지를 마련하고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에 맞서 끝까지 저항했던 곳이며, 2015년 12월 전라북도 기념물 제131호로 지정됐다.

전북도 송승호 문화유산과장은 “지난 4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원광대학교 사학과가 보유하고 있는 탐방

온기·기와 등 생활도구를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리기 위해 기증했다”며,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에서 끝까지 저항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송고한 정신을 알리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부패한 지도층에 저항하고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중이 주체가 되었던 민주주의 뿌리로서 의미가 크다”며,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를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찾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원주=영재복기자

남원시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 진행

남원시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24일과 25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전통시장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생존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추진됐으며, ‘충북 단양구경시장’ 안명환 상인회장을 초청해 진행했다.

단양구경시장은 한때 큰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대표적 관광형 시장으로 지역 특산물인 마늘과 연계된 다양 한 먹거리가 최근 관광객들에게 큰 호

응을 얻고 있다. 또한 관공인프라와 전통시장과의 연계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으며 적용할만한 사례이다.

첫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남원센터 등 다양한 주체가 참석하여 공설시장이 나이기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5일 진행된 공설시장 상인 대상 교육 및 간담회에는 50명의 상인이 참석했다.

강인식 의원은 “이번 연구회 활동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고 /남원=김기우 기자



무주서 ‘도지사와 함께가는 정책 소풍’

26일 무주군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지역특별시 무주, 2024 무주 방문의 해’를 주제로 열린 ‘도지사와 함께가는 정책소풍’에 김관영 도지사와 흰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침석자들이 군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 “방송3법·노란봉투법 입법 절차 위법성 없어”

민주 “현재 결정 존중… 법안 처리 속도”

국힘서 제기한 사건 모두 기각… “국회법 준수, 법안 처리 이뤄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방송3법’, ‘노란봉투법’ 입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건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현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방송3법에 대한 현재 결정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반겼다.

조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책무”라며 “방송3법 개정으로 혼란이 모두 해결되는 않겠지만, 공영방송의 독립과 방송의 자유를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축산인의 실익도모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고창부안축협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협 한우명품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1길 13
예약문의 : 063-563-6001

부안한우명품관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85-1
예약문의 : 063-581-2349